

업계, 정부가 힘 모아 철강산업 구조 전환 가속화

- 1.13(화) 17시, 2026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
- 정부·업계 “철강특별법 등 기반 토대로 정책 추진 가속화” -

정부와 철강업계가 2026년을 맞아 철강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문신학 차관은 1.13.(화) 17시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26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철강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새해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였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장인화 한국철강협회장을 비롯해 주요 철강사 대표 등 업계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

지난 해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성숙기 산업으로서 직면한 근본적인 구조적 도전 속에서, 주요국의 경쟁적 보호무역 조치가 복합되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업계는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철강산업특별법(K-스틸법)」의 핵심 과제들의 조속한 이행을 건의하였다. 특히,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업계 애로를 충분히 반영하고 주요 철강 수출 대상국의 관세 인상, 쿼터 축소 등에 대응한 정부의 총력 대응을 요청하였다.

문 차관은 신년인사회 축사에서, “철강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방향과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핵심 정책과제의 이행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점 조정 대상인 철근의 설비규모 조정 계획을 구체화하고, 수소 환원제철 등 연구개발(R&D) 지원,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확대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면서, “EU TRQ를 비롯한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시장 상황과 수급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설비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이른 시일 내 「특수탄소강 R&D 로드맵」 수립, 「철스크랩

산업 육성방안」 발표, 철강-원료-수요산업간 상생협약 체계 구축 등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산업공급망정책관 철강세라믹과	책임자	과 장	송영상 (044-203-4690)
		담당자	사무관	이두정 (044-203-4692)



□ 개 요

- (일시) 2026년 1월 13일(화) 17:00
- (장소) 포스코센터 아트홀(서관 4층)
- (참석자) 차관, 철강업계 CEO 및 임원, 학계, 언론 등 150명 내외
- (내용) 신년사 및 격려사, 떡케이크 커팅식, 교류 행사 등

< 세부일정(안) >

시 간	내 용	비 고
17:00~17:20 (20')	등록 및 사전 교류	리셉션(다과)
17:20~17:25 (5')	입장	차관, 회장단
17:25~17:30 (5')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17:30~17:32 (2')	주요내빈 소개	
17:32~17:36 (4')	모두발언	한국철강협회 회장
17:36~17:40 (4')	모두발언	차관
17:40~17:43 (3')	기념촬영	
17:43~17:50 (7')	떡케이크 커팅식	차관, 회장단
17:50~17:55 (5')	신년덕담 및 건배제의	주요 내빈
17:55~	퇴장	